

제3부 환경관리 기반 조성

Creating an Environmental Management Foundation

고양특례시

제3부 환경관리 기반 조성

Creating an Environmental Management Foundation

● 제1장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

01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48
02	민간단체 활동 지원	67
03	환경보전 홍보	74
04	지속적인 환경교육 실시	79

● 제2장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확충 제도

01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86
----	------------	----

● 제3장 환경오염 예방기능 강화

01	환경영향평가제도	90
02	화학물질 안전관리	104

제1장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

제1절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¹⁾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Rio+20)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주제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리우회의(1992) 등 주요 지속가능발전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기구설립’이라는 두 핵심의제가 다루어졌다. 이에,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0년 계획>을 채택하였으며,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정치포럼(HLPF : High Level Political Forum) 설치 및 유엔환경회의(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lan)를 격상하였다. 또한, Post-2015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및 이행계획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70차 UN 정기총회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2015(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2015)’에서는 2015년 종료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대체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의결하고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주요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채택하였다. SDGs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이행주체가 ‘We The People’임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 중앙·지방정부, 시민, 기업 등 각 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전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022년 1월 4일에 기존의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있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1) 내용 및 사진 출처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유엔 SDGs 2030은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음. 169개 세부목표는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3개국이 모두 참여한 것이라 17개 목표별로 각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세부목표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다.

SDGs의 목표연도인 2016부터 2030년까지 각국은 매년 7월 유엔총회에 SDGs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4년에 한 번씩은 각국 정상회담을 통해 이행체계를 점검하기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230여 개의 평가지표(Indicators)를 마련하고 있다.



2015년 유엔이 채택한 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등 소위 5개 축(5Ps)을 바탕으로 정립된 것이다. 사람, 지구, 번영 축은 사회발전, 경제개발, 환경보호를 위한 목표이고, 평화와 파트너십 축은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과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첫째, 사람 축은 모든 인류가 존엄성과 평등 속에서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킨다는 것.

둘째, 지구 축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행동을 비롯하여 지구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셋째, 번영 축은 모든 인류가 번창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진보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넷째, 평화 축은 근심과 폭력 없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한다는 것.

다섯째, 파트너십 축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두면서 모든 국가, 모든 이해당사자, 모든 사람들의 참여로 강화된 지구적 연대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부흥시킴으로써 이 의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동원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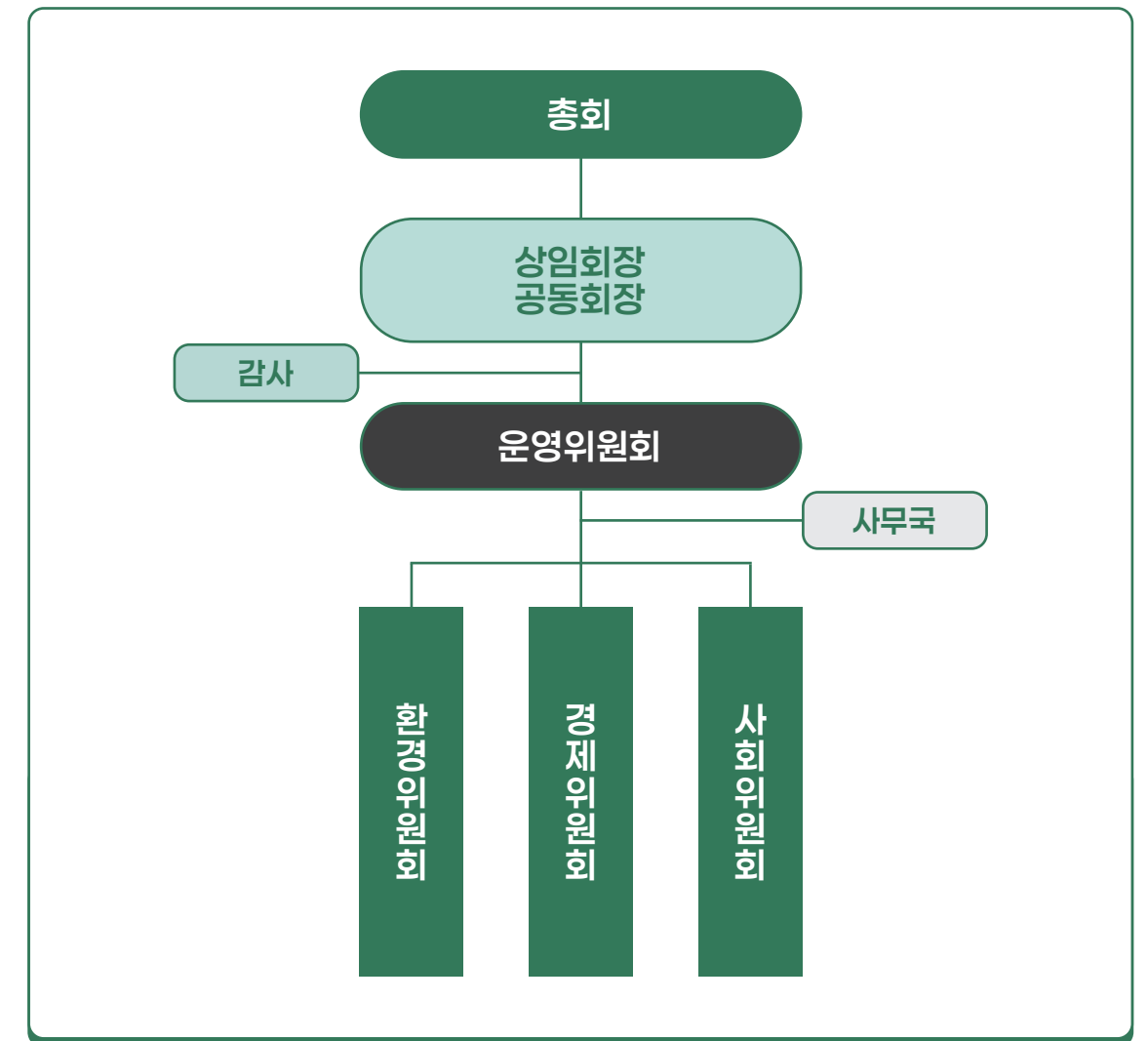


2.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 고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작성된 지방의제21을 일컫는 말이다. 지구환경에 대한 각종 오염으로부터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세계 179개국의 정상들이 모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인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실천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2000년 8월 26일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를 창립하였다.

고양시민과 시민단체, 기업인, 행정기관 등 각계각층의 시민대표들이 함께 참여하여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 단계로 고양시민이 실천해야 할 의제의 작성을 완료하고 2003년부터 의제를 실천하는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외적인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고 시민들과 보다 가깝고 친숙한 의제실천 조직을 목적으로 2008년 명칭을 「높푸른 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였고 다시 지방의제21의 추진정신을 재확립하여 2013년 「고양시의제21협의회」로, 2016년에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요활동 내용은 www.goyang21.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1-1】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3.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요사업 및 활동

2022 ~ 2023 주요 사업성과

1) 위촉식 및 워크숍

- 기간 : 2022. 12. 12.(월) 14:00 ~ 16:30
- 장소 : 덕양구청 대회의실
- 참여인원 : 지속협 위원 등 100여 명
- 내용 : 120명 위원 위촉, 전문가 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가치 및 세부목표 이해 /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2022 위촉식 및 워크숍

2) 고양시 SDGs 세부목표 연구

- 고양시민과 함께 고양시 SDGs 세부목표 재검토
- 분과위원회별로 분야별 agenda 작성을 위한 기초교육 및 분야별 토의

■ 2023년 SDGs 세부목표 연구

- 기간 : 2023. 10. 12.(목) / 11. 8.(수) / 11. 30.(목) ~ 12. 7.(목)
- 장소 : 덕양구청 등
- 참여인원 : 지속협 위원 등 70여 명
- 내용 :
 - (1차)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경기도 목표수립 사례 공유(임병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주제별 소모임 구성 논의 등 토의
 - (2차) 고양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점검 및 분야별(환경/경제/사회) 토의
 - (3차)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이해



2023 SDGs 세부목표 연구

3) 의제 기획사업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각종 위원회 회의 추진, 활동 방향 기획 및 방법 모색
- 전문가 자문을 통한 발전방향 논의

■ 2023년 추가위촉식 및 역량강화 교육

- 기간 : 2023. 5. 8.(월) / 5. 18.(목)
- 장소 : 일산동구청 대회의실, 덕양구청 소회의실
- 참여인원 : 지속협 위원 등 100여 명
- 내용 : 추가 12명 위원 위촉식 및 역량강화 교육 (지속가능발전과 SDGs 이해 /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과 위원의 역할 / 최병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2023 추가위촉식 및 역량강화 교육

■ 2023년 임시총회 및 총회준비위원회 등 기타 회의

- 기간 : 2023. 1. ~ 12.
- 장소 : 덕양구청 대회의실 등
- 참여인원 : 지속협 위원 등 230여 명
- 내용 : 지속협 운영 등을 위한 각종 회의 등 추진
 - 총회준비위원회 4회, 선거관리위원회 3회, 임시총회 1회
 - 인사위원회 3회, 운영위원회 3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 1회, 특별기구 모임 1회 추진



임시총회 및 총회준비위원회 등 기타 회의

4) 교류협력 및 역량강화

- 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관계 기관·단체 등 네트워크 활성화

■ 2023년 역량강화 교육

- 기간 : 2023. 12. 20.(수) 14:00 ~ 16:00
- 장소 : 고양꽃전시관 컨퍼런스룸
- 참여인원 : 지속협 위원 등 약 30여 명 참석
- 내용 : 지속가능발전의 이해와 흐름 및 지역의 역할(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2023 역량강화 교육

5) 지속가능발전대학

- 지역의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여 비전과 목표 설정
- 공론장에 대한 이해와 실무 역량 강화

2023년 고양시 지속가능발전대학

- 기간 : 2023. 10. 31.(화) ~ 11. 14.(화) (매주 화요일, 3회)
- 장소 : 일산동구청, 덕양구청 등
- 참여인원 : 고양시민 120여 명 참석, 교육 수료자(기본/심화 80% 이상 이수) 34명
- 내용 : 고양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론장 설계와 운영 시민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회차	일정	장소	주요 내용
1차	10.31(화) 10:00 ~ 16:00	일산동구청 다목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1] 공론장 개념과 의미, 공론장 구성과 운영 원칙<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태순(사단법인 한국공론포럼 대표)· [강의2] 공론장 사례<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금홍(연천군 중면 주민자치위원회 두루미분과장)· [강의3] 성공적인 공론장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태순(사단법인 한국공론포럼 대표)
2차	11.7(화) 10:00 ~ 16:30	덕양구청 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1] 공론장 운영 실무<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경숙(광명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강의2] 공론장 설계 연습<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태순(사단법인 한국공론포럼 대표)· [분임토의] 가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습<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임별 역할 배정·토의, 결과 발표· [수료식] 수료식
3차	11.14(화) 08:30 ~ 17:00	연천군 중면 행정복지센터 /의정부시 장암종합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탐방1] 연천군 임진강두루미 보호 주민공론장 사례<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태순(사단법인 한국공론포럼 대표)· 은금홍(연천군 중면 주민자치위원회 두루미분과장)· [현장탐방2] 의정부시 소각장 주민공론장 사례<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태순(사단법인 한국공론포럼 대표)· 조득현(의정부시 자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2023 고양시 지속가능발전대학

6) 소셜다이닝 및 성인지 역량강화

-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자신의 삶과 지역공동체의 성평등 정책·문화 이해
- 건강한 식생활을 정립하고, 함께하는 식사를 매개로 커뮤니티 형성,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지속가능 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위원회 회의 등 추진

2023년 현장탐방

- 기간 : 2023. 10. 16.(월) 08:30 ~ 18:00
- 장소 : 화성시
- 참여인원 : 지속협 위원 등 약 20여 명
- 내용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해 및 화성지속협 활동 사례 공유(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권길현 사무국장), 화성지속협 위탁사업 프로그램 참여



2023 현장탐방

■ 2023년 소셜다이닝 및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 기간 : 2023. 11. 21.(화) / 11. 23.(목) / 11. 30.(목) 12. 12.(화)
- 장소 : 관산동 마을행복창고 / 항공대학교 / 서삼릉 / 무원고등학교
- 참여인원 : 고양시민 등 100여 명
- 내용 :
 - 소셜다이닝을 통해 참여자 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식사와 대화를 통한 공동체 가치 형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화를 형성하고 성평등 의식 확산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 실시
 - 소셜다이닝 2회,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2회



2023 소셜다이닝 및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 2023년 사회위원회 회의

- 기간 : 2023. 9. ~ 12.
- 장소 : 덕양구청 등

- 참여인원 : 지속협 위원 등 70여 명
- 내용 : 위원 간 교류, 활동 방향 논의 등
 - 분과위원회 회의 등 6회 추진



2023 사회위원회 회의

7) 해설이 있는 생물다양성 탐사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탐사 프로그램 추진
- 지속가능 환경위원회 주관으로 위원회 회의 등 추진

■ 2023년 생물다양성 탐사

- 기간 : 2023. 12. 16.(토) 10:00 ~ 12:00
- 장소 : 고양대덕생태공원
- 참여인원 : 고양시민 등 30여 명
- 내용 : 생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겨울 철새 탐조, 플로깅 활동



2023 생물다양성 탐사

■ 2023년 교육 및 현장탐방

- 기간 : 2023. 10. 23.(월) / 12. 18.(월)
- 장소 : 나들라운 회의실 / 에코롱롱큐브 신재생에너지 시설
- 참여인원 : 지속협 위원 등 30여 명
- 내용 :
 - 전문가 교육(지속가능발전의 이해 및 광명지속협 활동 사례공유 / 허기용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대응 방법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방법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 증진 체험 및 탐방



2023 교육 및 현장탐방

■ 2023년 환경위원회 회의

- 기간 : 2023. 9. ~ 12.
- 장소 : 덕양구청 등
- 참여인원 : 지속협 위원 등 80여 명
- 내용 : 위원 간 교류, 활동 방향 논의 등



2023 환경위원회 회의

8) 도시농업 흙팜

-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농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열대작물을 활용한 현장 체험 등 활동
- 지속가능 경제위원회 주관으로 위원회 회의 등 추진

■ 현장탐방

- 기간 : 2023. 10. 23.(목) 10:00 ~ 17:00
- 장소 : 드렌비팜, 늘푸른주말농장, 꿈팜
- 참여인원 : 지속협 위원 등 20여 명
- 내용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도시농업의 이해, 열대작물 재배 현황, 스마트팜 이해 등 흙팜 체험



2023 현장탐방

2023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기간 : 2023. 11. 28.(화) 14:00 ~ 16:00
- 장소 : 고양관광정보센터 영상관
- 참여인원 : 고양시민 등 20여 명
- 내용 :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 만들기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10'	개회 행사 안내 및 참석자 소개
14:10~15:30	80'	좌장 · 나도은(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발제 · 2023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괜찮은가?' -김용덕(고양시정연구원 데이터센터장) ·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발전 방향 -이상백(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지정토론 · ESG 경영과 기업의 미래 -송기섭((사)고양시경제협회 회장) · 사회적 농업 -정현석((주)드렌비팜 대표) · 골목상권을 살리는 가장 작은 방법 -이장세(前 대화동 골목상권 상임회장)
15:30~15:50	20'	질의 질의
15:50~		폐회 폐회



202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23년 경제위원회 회의

- 기간 : 2023. 9. ~ 12.
- 장소 : 덕양구청 등
- 참여인원 : 지속협 위원 등 50여 명
- 내용 : 위원 간 교류, 활동 방향 논의 등
- 분과위원회 회의 등 4회 추진



2023 경제위원회 회의

9) 고양시 SDGs 박람회

- 고양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고양시의 SDGs 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플랫폼

2023년 고양지속가능발전포럼

- 기간 : 2023. 12. 15.(금) / 12. 21.(목)
- 장소 : 일산동구청 다목적실 / 고양관광정보센터 영상관
- 참여인원 : 고양시민 등 60여 명
- 내용 :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빙,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포럼 개최



2023 고양지속가능발전포럼

10) 보고서 제작 및 보고회

- 협의회 소식, 사업내용 공유 및 홍보 자료제작

■ 2023년 활동보고회

- 기간 : 2023. 12. 20.(수) 16:00 ~ 17:00
- 장소 : 고양꽃전시관 컨퍼런스룸
- 참여인원 : 지속협 위원 등 30여 명
- 내용 : 2023년 위원회 및 지속협 활동 보고



2023 활동보고회

■ 2023년 활동보고서 제작

- 기간 : 2023. 12.
- 내용 : 지속협 위원 및 관련 활동가, 관계 기관 활동 내용 공유 및 홍보자료 제작

11)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비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생활습관 개선 등의 컨설팅 및 탄소중립 캠페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유도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기간 : 2023. 5. ~ 12.
- 장소 : 해당 사업장
- 내용 :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양성교육 참여
 - 가정(온라인) 또는 상가에 방문하여 온실가스 사용량 진단 및 감축방안 안내
 - 가정 88가구, 상가 17개소 총 105개 진단 실시
 - 사업장 105개 중 67개 전년도 대비 유지 및 감축(약 63%)
 - 67개 온실가스 감축량



2023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탄소중립 실천운동(플로깅) 캠페인

- 기간 : 2023. 11. ~ 12.
- 장소 : 대화동, 능곡동, 관산동
- 참여인원 : 고양시민 등 250여 명
- 내용 :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서약 및 에너지 절약활동 유도 및 캠페인 진행



2023 탄소중립 실천운동(플로깅) 캠페인

제2절 민간단체 활동 지원

1. 환경분야 민간단체 현황

2023년 현재 우리 시 환경분야에서 활동 중인 민간단체는 약 25여 개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오랫동안 지켜온 자연환경을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전하기 위해 환경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사회단체의 발전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7년 3월 7일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민간단체를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 지방보조금 지원 및 활동 현황

고양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매년 관내 비영리민간 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지원 예산액은 약 308백만원으로 24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20개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약 248백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환경교육, 환경보전 사업, 환경감시단 활동, 하천 네트워크 활동 등이다.

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지원현황

【표 3-1-2】 2022년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

(단위 : 천원)			
소관부서	단체명	사업명	지원금
합 계			308,215
환경 정책과	고양시하늘종합사회복지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 컨설팅	11,000
	에코코리아	2022년 시민과학 기반 생물다양성 탐사 및 미디어북 제작	15,000
	환경재단	고양환경영화제	50,000
	고양동주민자치회 등 3개단체	주민친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90,000
	야생생물관리협회 고양지회 등 3개단체	농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24,000
	어린이식물연구회	장항습지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10,000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생태환경 역량강화사업 “에코365”	5,000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환경이야기 쓱쓱! 우리의 실천은 쓱쓱!	5,000
	고양시삼송동종합복지회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인식개선 사업 Z세대와 함께하는 『기후행동실천 UCC공유 프로젝트』	5,000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기후행동실천 UCC공유 프로젝트』	5,000
기후에너지과	고양환경단체협의회 등 2개단체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지원	10,500

생태 하천과	고양환경단체협의회	고양하천 Network 사업	7,000
	어린이식물연구회	우리하천 자연스럽게	3,120
	한국환경운동본부	한류천 수호천사	1,860
	고양자연생태연구회	도촌, 대장천, 생명을 품다!	11,230
	한국민속문화협회	지속가능한 하천	7,970
	풀잎봉사단	하천 정화, 유해 외래식물 제거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	1,050
	주은EM센터	EM 생활환경교육 고양 가좌천 살리기-정화활동 및 꽃길가꾸기,가좌천 생태 모니터링 및 하천생태교육	4,600
	한국걸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	지구를 살리는 환경지킴이	5,000
	고양지역환경본부	대장천, 도촌천 가꾸기	10,000
	고양자전거학교	고양시 생태하천지도 제작10(한강 수계) 및 하천정화 활동	12,740
	LOVE 공릉천	맑은물 공릉천	2,085
	하천생태동아리	저어새 찾아오는 생태하천, 장월평천	2,700
	에코코리아	기후위기 지구를 지키는 고양 맑은 하천!	8,360

2022년 보조금 사업 내용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사업목적 : 가정, 상가 등 비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시설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의 컨설팅 및 탄소중립 캠페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
- 사업기간 : 2022. 6. ~ 2022. 12.
- 사업내용 :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모집 및 양성,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캠페인 등
- 참여인원 : 총 120가정

■ 시민과학 기반 생물다양성 탐사 및 미디어북 제작

- 사업목적 : 시민들에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의 중요성 인식 확산
- 사업기간 : 2022. 3. ~ 2022. 12.
- 사업내용 :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팀을 구성하여 생물종 조사 및 목록화 활동 실시
- 참여인원 : 정발산 시민생태모니터링단

■ 고양환경영화제

- 사업목적 : 환경영화를 통해 전 세계 환경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비가 아닌 생산의 축제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

- 사업기간 : 2022. 7. ~ 2022. 11.
- 사업내용 : 영화제 개·폐막식 개최, 우수 영화 상영 등
- 참여인원 : 총 10,685명

■ 주민친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 보행친화도시를 위한 주민친화거리 조성을 통하여 탄소중립 및 보행문화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
- 사업기간 : 2022. 7. ~ 2022. 10.
- 사업내용 : 학교, 주택밀집지역 주변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주민이 기획·운영을 주도하는 자발적인 시민참여 추진
- 참여인원 : 총 13,300여명

■ 농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 사업목적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 예방
- 사업기간 : 2022. 3. ~ 2022. 12.
- 사업내용 :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사업 진행
- 추진실적 : 멧돼지 28마리, 고라니 14마리, 까치 1,758마리 등 총 1,800마리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 장항습지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 장항습지 생태교육 및 습지인식 증진
- 사업기간 : 2022 3. ~ 2022. 12.
- 사업내용 : 장항습지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교교육연계 환경교육 실시
- 추진실적 : 생태탐방 104회, 인원 1,076명

■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생태환경 역량강화사업 “에코365”

- 사업목적 : 수행과제를 통한 친환경 실천생활 습관 형성 고취와 참여자들이 직접 결정한 친환경 주제를 정하여 지역사회 캠페인 실시
- 사업기간 : 2022. 4. ~ 2022. 11.
- 사업내용 : 에코365 정기교육 10회, 에코365 외부체험활동 4회, 지역연계체험활동 2회, 지역주민 환경특강 2회, 지역연계 캠페인 1회
- 참여인원 : 연인원 187명(남: 6명, 여 181명)

■ 환경이야기 쓱쓱! 우리의 실천은 쓱쓱!

- 사업목적 : 환경교육 진행, 환경보호 실천 활동 진행, 실천 활동 격려 및 선물 전달 등 환경교육 개발 및 제공
- 사업기간 : 2022. 8. ~ 2022. 11.

- 사업내용 : 사업홍보 및 참여 기관 모집 1건/10곳, 환경교육 12건, 환경보호 실천 활동 9건, 실천 활동 격려 활동 9건 사업 추진
- 참여인원 : 연인원 323명(남: 166명, 여 157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인식개선 사업 Z세대와 함께하는 「기후행동실천 UCC공유 프로젝트」

- 사업목적 :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후행동실천 그린페스티벌을 진행하여 일상 생활에서 탄소저감 실천에 대한 중요성 인식 계기, 기후변화 위기상황에 대한 문제인식 제고 및 관심을 증진
- 사업기간 : 2022. 4. ~ 2022. 11.
- 사업내용 : 기후변화 주간행사 '지구의 날' 캠페인, 기후환경 주제 동화구현 6회, 해양오염과 지구온난화 손인형극 4회, 지역주민 기후행동실천 그린 페스티벌 개최(폴로킹, 캠페인, 버스킹 등)
- 참여인원 : 연인원 1,361명(남: 538명, 여 823명)

■ 생활 속 탄소줄이기 <탄소 다이어트>

-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환경피해를 이해하며, 에너지 절약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 탄소배출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 인식증진
- 사업기간 : 2022. 4. ~ 2022. 12.
- 사업내용 : 환경주민모임 <탄소다이어트> 구성 : 환경교육 10회, 환경주민모임 9회, 평가 2회, 환경캠페인 2회 등 친환경 홍보물품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
- 참여인원 : 연인원 655명(남: 196명, 여 459명)

■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지원

- 사업목적 :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 사업기간 : 2022 3. ~ 2022. 12.
- 사업내용 : 환경오염 불법 행위 감시 및 현장계도 실시
- 추진실적 : 감시활동 849건(행정기관 통보 257건, 현장계도 587건, 기타 5건)

■ 맑은하천 가꾸기 하천네트워크 활동지원(13개 보조금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에 봉사하는 고양하천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하천보호활동 및 하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상의 각종 교육, 회의, 평가, 행사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2. 3. 1.~11. 30.
- 사업장소 : 고양시 관내 하천
- 사업성과 :
 - 하천네트워크 정화활동 분야 (403회 30,402명)
 - 생태교육·EM교육 분야 (32회 777명)
 - 모니터링 분야 (76회 236명)
 - 행사 및 축제, 회의, 캠페인 분야 (11회 41명)
 - ▶ 코로나로 인해 축제 및 생태교육 등 단체 활동 실적 감소

- 제21회 한국 강의 날 광주대회
 - ▶ 하천살리기 콘테스트 : 1개팀 참가
 - ▶ 생명의강 UCC 공모전 : 3개팀 참가
- 고양시 생태하천지도 제작 : 한강편

【표 3-1-3】 2023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소관부서	단체명	사업명	지원금
합 계			248,000
환경 정책과	행복한교육 재미공작소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사업	20,000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11,000
	(사)누리보듬 등 3개단체	주민친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90,000
	야생생물관리협회고양지회 등 3개단체	농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16,500
기후에너지과	고양환경단체협의회 등 2개단체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지원	10,500
생태 하천과	고양지역환경본부	대장천 하천 정비 및 꽃길 만들기	12,000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양시지회	고양시 특수임무유공자회 하천수변 및 수중정화활동	5,100
	한국숲사랑 고양시지회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가꾸기	8,100
	한국걸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놀이	5,400
	한국민속문화협회	지속가능한 하천 가꾸기(원당천)	9,600
	고양자연생태연구회	도촌·대장천, 생명을 품다!	10,110
	하천생태동아리	장월평천 자연환경 모니터링	2,430
	어린이식물연구회	달마다 들려주는 도촌천 생물이야기	2,780
	주은EM센터	EM 생활환경교육 및 하천정화활동	4,100
	에코코리아	고양 하천에서 시작하는 탄소 중립!	9,370
	풀잎봉사단	하천 정화, 유해 외래식물 제거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	900
	LOVE 공릉천	맑은물 공릉천	270
	고양환경단체협의회	고양하천Network 사업	6,300
	고양자전거학교	고양시 생태하천지도11(한류천 수계) 및 하천정화활동	14,800
	고양중센터	창릉천을 우리의 고향 하천으로	8,740

2023년 보조금 사업 내용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사업

- 사업목적 : 지속적인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시민주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3. 4. ~ 2023. 7.
- 사업내용 : 저탄소 녹색소비시장 2회, 시민참여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 참여인원 : 총 973명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사업목적 : 가정, 상가 등 비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시설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의 컨설팅 및 탄소중립 캠페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
- 사업기간 : 2023. 4. ~ 2023. 12.
- 사업내용 :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모집 및 양성,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캠페인 등
- 참여인원 : 총 105개소 가정, 상가

■ 주민친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 보행친화도시를 위한 주민친화거리 조성을 통하여 탄소중립 및 보행문화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
- 사업기간 : 2022. 7. ~ 2022. 10.
- 사업내용 : 학교, 주택밀집지역 주변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주민이 기획·운영을 주도하는 자발적인 시민참여 추진
- 참여인원 : 총 13,300여 명

■ 농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 사업목적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 예방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사업내용 :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사업 진행
- 추진실적 : 멧돼지 38마리, 고라니 2마리, 까치 1,996마리 등 총 2,036마리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지원

- 사업목적 :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및 주민계도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사업내용 : 환경오염 불법 행위 감시 및 현장계도 실시
- 추진실적 : 감시활동 1,065건(행정기관 통보 336건, 현장계도 729건)

■ 맑은하천 가꾸기 하천네트워크 활동지원(15개 보조금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에 봉사하는 고양하천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하천보호활동 및 하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상의 각종 교육, 회의, 평가, 행사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3. 3. 1. ~ 11. 30.
- 사업장소 : 고양시 관내 하천
- 사업성과 :
 - 하천네트워크 정화활동 분야 (359회 21,924명)
 - 생태교육·EM교육 분야 (43회 1,205명)
 - 모니터링 분야 (69회 227명)
 - 제22회 한국 강의 날 익산대회
 - ▶ 강살리기 우수사례 콘테스트 : 3개팀 참가
 - 고양시 생태하천지도 제작 : 한류천편

제3절 환경보전 홍보

1. 환경보전 홍보의 필요성

기후변화, 생물종다양성 보전, 지구 온난화, 자원고갈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환경의식 변화를 통한 환경보전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의식변화와 실천을 이끌어내려면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러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가 필수적이다.

환경보전 홍보활동은 환경오염의 현실, 환경정책들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자발적인 환경보전실천 노력과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낸다. 또한, 친환경이미지를 강화하며 사회주체들의 친환경 실천행동을 활성화하여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성과를 증진할 수 있는 핵심활동이다. 또한, 적극적인 환경홍보 활동은 무엇보다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환경 보전시책에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환경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환경 보전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환경보전에 대한 자발적인 주민참여,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 호응, 지역사회 주체 간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 시민 환경보전의식 확산에 도움을 주고 환경보전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2. 환경의 날 행사

1972년 6월 5일,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인류 최초의 세계적인 환경 회의가 열렸으며, 총 113개 나라와 3개 국제기구, 257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이 회의에서 각국이 '유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한 뒤, 제27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5일을 법정 기념일로 정하고,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2023년 일산문화광장에서는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 탄소중립 나눔마켓 행사를 진행하였다.



환경의 날 기념식 및 탄소중립 나눔마켓 행사(일산문화광장)

3. 기후변화 주간 운영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민간주도의 세계 기념일이다.

매년 '지구의 날(4. 22.)'을 맞이하여 전·후 1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저탄소 생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기후체제(post-2020) ¹⁾ 2020년 이후 국제사회 신기후체제 (New Climate System)를 말한다.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는 선진국만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했다. 반면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감축의무를 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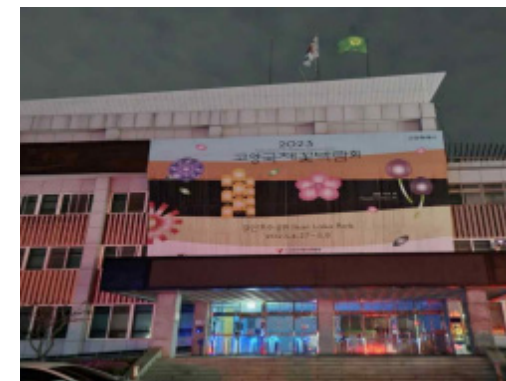
출범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 BUA 대비 37%)'달성을 위한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하여 환경부, 산하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에서도 매년 '지구를 위한 소등행사' 및 여러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생활에 대한 시민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도 기후변화주간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라벨 분리배출 캠페인', '그린홈 환경보전 캠페인' 및 지구의 날 기념 지구사랑음악제 등을 추진했다. 특히 '지구사랑음악제 및 소등행사'에는 은빛마을 5단지 및 인근 주민 약 200명이 동참하였으며, '투명페트병 라벨 분리배출 캠페인'에는 관내 어린이집 5개소 관아 23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두드러졌다.

2023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도 관내 공공기관 30개소와 관내 공동주택 21개 단지, 행주산성 등에서 소등행사를 진행하는 등 매년 기후변화 주간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고 있다.

가 전국 동시 소등행사



고양시청 소등행사 / 덕양구청 소등행사

1) 2020년 이후 국제사회 신기후체제(New Climate System)를 말한다.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는 선진국만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했다. 반면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감축의무를 지게 된다

나 각종 캠페인



투명페트병 라벨 분리배출 캠페인(2022년) / 그린홀 환경보전캠페인(2022년)

다 지구의 날 기념 지구사랑음악제



지구사랑음악제(2022년)

4. 차 없는 거리 행사

고양시에는 대규모 산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약 36%, 2017년 기준)이 수송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약 80% 가량이 승용차에서 배출되고 있어, 개인차량 이용률을 줄이는 것이 고양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해 고양시에서는 2022년 7월~10월 넷째 주 토요일에 고양동, 화정1동, 화정2동 등지 일원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진행하였다.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줄여 차량을 통제된 뒤 그 자리에 도시재생 홍보관, 환경체험 홍보관, 소상공인 프로그램 등 고양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이벤트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차 없는 거리' 행사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나온 여러 의견도 행사에 반영하였다.

총 3개 구간 11회의 행사 동안 약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고취하였다.



차 없는 거리 행사

5. 고양 환경영화제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는 기후변화, 생태계 등 환경 관련 영화를 상영하는 '2022 고양환경영화제'를 2022. 10. 22. ~ 10. 23. 양일간 개최하였다. 22일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야외공간에서 개회식 및 야외상영을 시작으로, 23일은 라페스타 롯데시네마에서 13시, 15시, 17시 환경영화를 상영하였다. 상영작은 '우리보다 큰', '플라스틱의 모든 것',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레시피' 등이었다.


환경영화제에서는 영화 상영 이외에도 체험프로그램(양말목 공예, 삼푸바 만들기, 밀랍랩 만들기),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트래쉬 버스터즈), 포토부스 및 다양한 이벤트존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고양 환경영화제(2022년)

■ 환경영화제 상영작


상영작 소개



우리보다 큰



플라스틱의 모든 것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레시피

제4절 지속적인 환경교육 실시

1. 환경교육의 필요성

환경교육은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인간과 자연 간의 올바른 관계를 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학습하여 실천하는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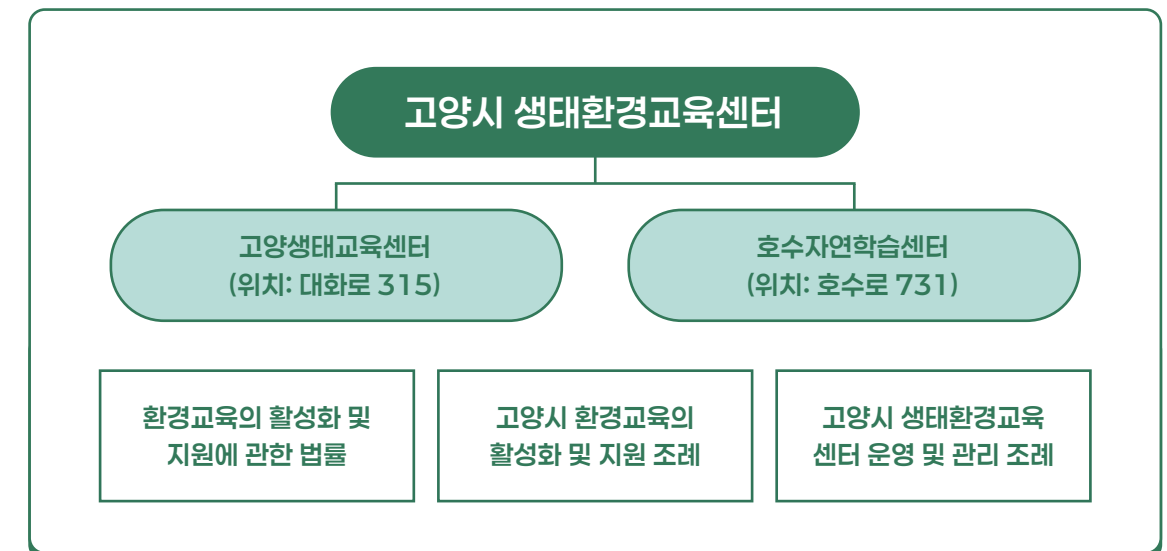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감염에 의한 질병, 그리고 지구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위기 등 21세기 인류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인식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환경교육은 현재와 미래에 도래할 환경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가치지향적, 행동지향적인 전인교육의 일환이며, 환경문제를 인식한 환경교육 대상자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실천하는 대중이 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발중심의 사회에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지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회가치체계의 전환을 유도하고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환경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 고양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2014. 11. 10. ~ 현재)
- 운영시간 : 화 ~ 토 (09:00~18:00) / 공휴일·월요일 휴관
- 운영인력 : 5명 (팀장 1명, 전문위원 1명, 직원 3명)
- 시설현황



구분	고양생태교육센터	호수자연학습센터
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15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
연 면 적	394.48㎡	119.12㎡
시설현황	(1층) 교육장, 전시실, 사무실 (2층) 교육장	교육장, 사무실
야외교육장	고양생태공원(58,435㎡)	호수공원 자연학습원(25,246㎡)
조 성 일	2013. 5. 25.	2014. 11. 20.
현황사진		

3.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

· 자연환경해설 및 체험

센터명	운영횟수/ 참가자수	강사	운영시간	내용
고양생태 교육센터	154회/1,870명	자원봉사자 26명	매주 화~토 1차: 10시~12시 2차: 14시~16시	공원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며 체험활동을 통해 생태계의 기능과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공존의 의미를 시민에게 알림
호수자연 학습센터	67회/740명	자원봉사자 11명		



고양생태교육센터 자연환경해설 및 체험 / 호수자연학습센터 자연환경해설 및 체험

· 교과 연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센터명	교육횟수/ 참가자수	교육시간	대상	내용
고양생태 교육센터	27/283	매주 토요일 1차 : 10시~12시 2차 : 14시~16시	초등학생, 가족 초등학생, 가족	교과과정과 연계된 내용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 등 환경 전반에 대해 교육함
호수자연 학습센터	16/132			



고양생태교육센터 교과 연계 프로그램 / 호수자연학습센터 교과 연계 프로그램

· 고양시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센터명	교육기간	대상	교육횟수/ 참가자수	내용
고양시 생태환경 교육센터	2023.5.1. ~ 11.30.	4~6학년 초등학생	146회 / 3,685명	환경부에서 지정받은 고양시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생태환경교육 센터와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함



생태계 속에 내가 있어요 (61회/1,578명)



지구야 우리는 참 다했다 (85회/2,107명)

· 씨앗 기후환경학교 운영

센터명	교육기간	대상	교육횟수/ 참가자수	내용
고양시 생태환경 교육센터	2023.04.01. ~ 11.30.	7세 유아	30회 / 528명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이끌어갈 어린이의 올바른 환경가치관 형성을 위해 기후위기의 원인 및 실천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구성하여 교육함



씨앗기후환경학교

· 실천으로 이끄는 환경교육

센터명	교육기간	대상	교육횟수/ 참가자수	내용
고양시 생태환경 교육센터	2023.9.8. ~ 10.26.	주민자치위원, 통장, 공무원	5회/132명	주민자치위원, 통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해 환경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친환경 실천을 이끌어 내고자 함



실천으로 이끄는 환경교육

· 고양시 기후환경학교 운영

센터명	교육기간	대상	교육횟수/ 참가자수	내용
고양시 생태환경 교육센터	2023.5.4. ~ 6.29. 매주 목요일	시민, 공무원, 환경활동가	8회/921명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원인부터 실천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해 시민의 환경의식을 증진시키고자 함



고양시 기후환경학교

· 자연환경해설사 기본 양성과정 운영

센터명	교육기간	대상	교육시간/ 참가자수	내용
고양시 생태환경 교육센터	2023. 9.~11.	성인	80시간/ 28명	2023년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 운영 (4개 분야 15과목) - 수료조건 : 출석률 80% 이상, 필기 평가 60점 이상, 해설시연 70점 이상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

· 일산호수공원, 가족참여 환경교육 운영

센터명	행사일자	대상	행사횟수/ 참가자수	내용
고양시 생태환경 교육센터	2023. 11. 4.~ 11. 11. 매주 토요일	7세이상자녀 동반가족	4회/146명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여러 환경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과 함께 자연에서의 체험 교육을 통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보전을 위한 실천 유도



토닥토닥 고생했어!

·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자원봉사자 워크숍

센터명	행사일자	대상	행사횟수/ 참가자수	내용
고양시 생태환경 교육센터	2023.9.19.(1차) 2023.11.23.(2차)	자원봉사자	2회/59명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를 방문한 시민들과 함께 공원의 생물을 관찰하고 생태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생물자원 및 교구재 활용에 대한 특강 및 체험활동 등 워크숍 개최



자원봉사자 워크숍(1차) / 자원봉사자 워크숍(2차)

제2장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확충 제도

제1절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1.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의의 및 제도 개선 내용

가 제도의 의의

-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법적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고 '93년부터 시행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감면 대상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 저공해자동차, 유로5 경유차, 유로6 경유차
 - 제5조 :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3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지속기간)
-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경감 대상

-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소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 기준 부과금액 인하(20,250원 → 15,190원)로 사실상 100분의 25 경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은 제외

라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text{대당기본부과금액} \times \text{오염유발계수} \times \text{차량계수} \times \text{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배기량) (차량노후정도) (행정구역별)

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 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 1.~6. 30.	당해 연도 9. 16. ~ 9. 30.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 1.~12. 31.	다음 연도 3. 16. ~ 3. 31.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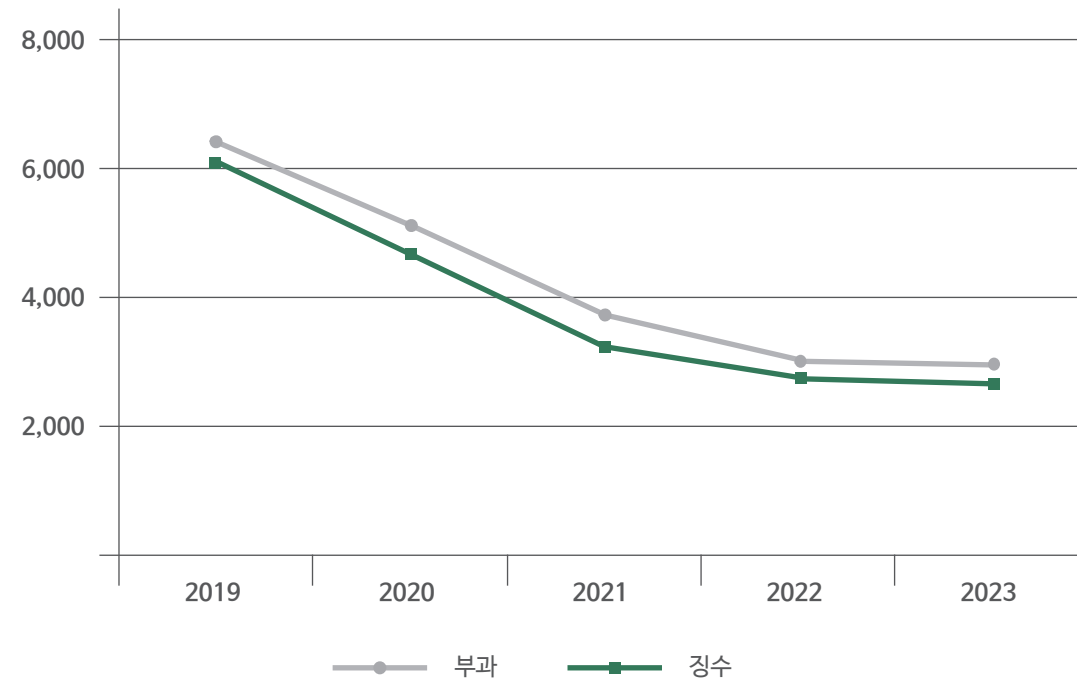
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자동차)

(2023. 12. 31. 현재 / 단위 : 건, 천원)

연도	부과(A)		징수(B)		징수율 (B/A)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계	245,098	15,340,311	218,419	14,110,027	92%
2023	44,414	2,988,030	39,157	2,668,586	88%
2022	46,502	3,038,697	42,237	2,781,099	92%
2021	59,901	3,759,705	50,236	3,261,353	87%
2020	81,707	5,140,732	73,085	4,714,229	92%
2019	103,490	6,439,874	95,098	6,134,445	95%

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변동추이(최근 5년간)

(단위 : 백만원)



3. 환경개선부담금 운영 현황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국고)로 편입되어 환경개선사업에 투자재원으로 지원 및 운용되고 있으며, 징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1%)와 시(9%)에 교부하여 부과·징수업무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개정(2024.4.2.)로 인해 2024년 4월부터 특례시는 국고납입액의 10% 교부

4.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 용도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환경 개선사업비 등 지원
- 저공해 기술개발 등 환경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등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 사업 지원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무공해공정기술 개발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

제3장 환경오염 예방기능 강화

제1절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요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러 가지 개발정책 또는 계획의 대안 중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적 측면에서의 배려를 의무화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공하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및 합리적인 개발 행위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수단으로 사업계획의 목적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시키는 도구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목적은 법 제1조(목적)에 명문화되어 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된다.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법 제4조)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 ③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⑤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때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⑥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 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⑦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된다.

①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 9개 분야, 개발기본계획 16개 분야로 구분된다.

【표 3-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1. 정책계획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때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항만의 건설	1)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연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다. 도로의 건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 망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라. 수자원의 개발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물환경보전법」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할 때
	3) 「지하수법」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하수법」제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4) 「하수도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할 때
	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마. 관광 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온천법」 제3조의2에 따른 온천발전종합계획	「온천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5)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
	6)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해당 계획의 확정 전
바. 산지의 개발	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는 때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되는 전국임도기본계획	계획의 확정 전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사. 특정 지역의 개발	1)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계획의 확정 전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아. 폐기물· 분뇨·가축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때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하기 전
자. 에너지 개발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때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계획의 확정 전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가. 도시의 개발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9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 사업의 민간 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때
	13) 삭제 <2016. 11. 29.>	
	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7) 단서에 따른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7) 단서에 따라 고시하기 전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기 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기 전
	9)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계획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1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②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17개 분야 8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표 3-3-2】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사업 분야	세부사업 및 규모
가. 도시의 개발	택지개발(25만㎡ 이상) 등 13개 사업
나. 산업입지 및 단지조성	국가·지방·농공단지(15만㎡이상)개발 등 7개 사업
다. 에너지 개발	에너지 개발을 위한 해저광업 등 8개 사업
라. 항만의 건설	어항시설 개발 등 6개 사업
마. 도로의 건설	도로신설 및 도로확장 등 해당 개발사업
바. 수자원의 개발	댐의 개발사업 등 3개 사업
사. 철도의 건설	철도의 건설사업 등 3개 사업
아. 공항의 건설	공항개발 사업 등 해당사업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하천공사중의 해당사업(공사구간 10km 이상)
차.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매립(30만㎡ 이상) 등 2개 사업
카.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사업 등 6개 사업
타. 산지의 개발	묘지·납골·초지 개발사업 등 3개 사업
파. 특정지역의 개발	지역균형개발 등 9개 사업
하.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 등 5개 사업
거.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등 2개 사업
너.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 등 4개 시설
더. 토석·모래 등의 채취	하천·산림내 토석 등 채취 7개 사업

③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3-3-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3) 「어촌·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사업의 승인등 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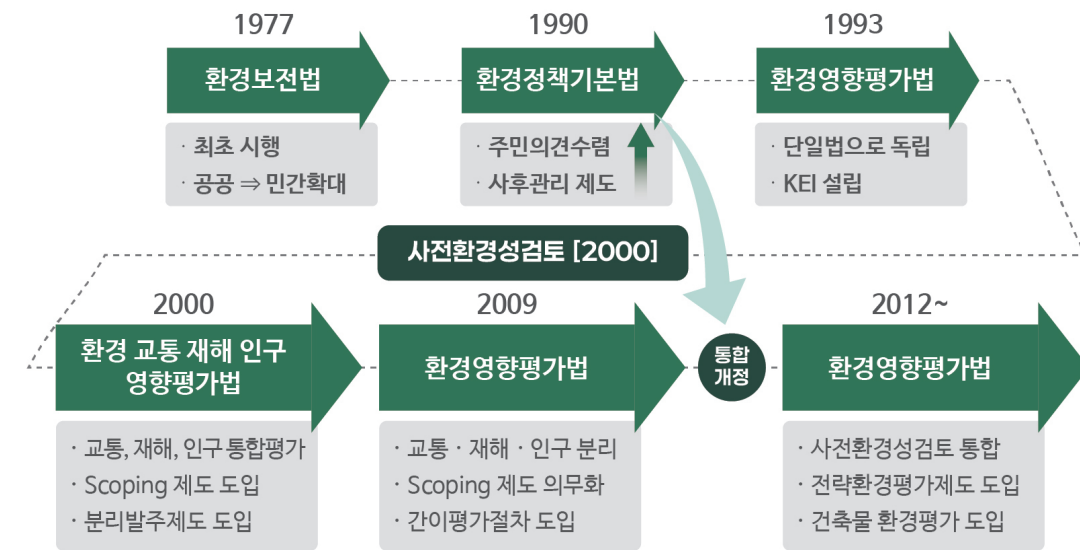
3.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3)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사업의 승인등 전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4.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5.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6.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가.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6.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다.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가.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1 권역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라.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마.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8. 「초지법」 적용지역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9. 그 밖의 개발사업	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사업의 승인등 전

2.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사항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유사목적의 평가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원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을 시행(2012. 7. 22.)하였다.

가 법령개정 연혁



나 주요 개정내용

1) 환경영향평가의 구분

(기존)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 및 소규모 개발사업)와 환경영향평가(대규모개발사업)로 이루어진 환경평가를 (개정)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개발사업)로 구분하여 평가 체계별 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2) 평가관련 위원회

(기존)평가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 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하였으나 (개정)3개 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운영하도록 개정되었다.

3) 행정계획의 구분

(기존)상·하위 행정계획 성격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개정) 행정계획의 성격을 고려,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하여 상위 행정계획단계부터 개발시행단계까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다.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결정 절차(스코핑: Scoping) 규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나) 정책계획에 대한 의무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전문가(자문위원 등) 의견수렴 체계로 개선

다) 스코핑시 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변화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스코핑 결과 공개 절차 규정

4) 주민의견수렴절차 개선

(기존)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기시 각각 주민의견수렴(다만,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의견 수렴을 실시한 경우 등은 평가단계 주민 의견수렴 생략 가능)을 실시하였으나, (개정)행정계획(개발기본계획)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을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여 개정되었다.

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기시에도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재수렴,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 공개 등(다만, 개별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기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생략 가능)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평가기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로 규정

5) 개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통합평가 근거 마련

(기존)개발관련 개별법령에는 대부분 개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나, (개정)개별법령에서 개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 협의 시기가 같으므로 해당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구분을 실시하였다.

6)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평가대행사업자 작성 근거 규정

(기존)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대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전문성을 갖춘 대행자가 전략환경평가서 작성대행을 하도록 하되, 대행업무 범위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차등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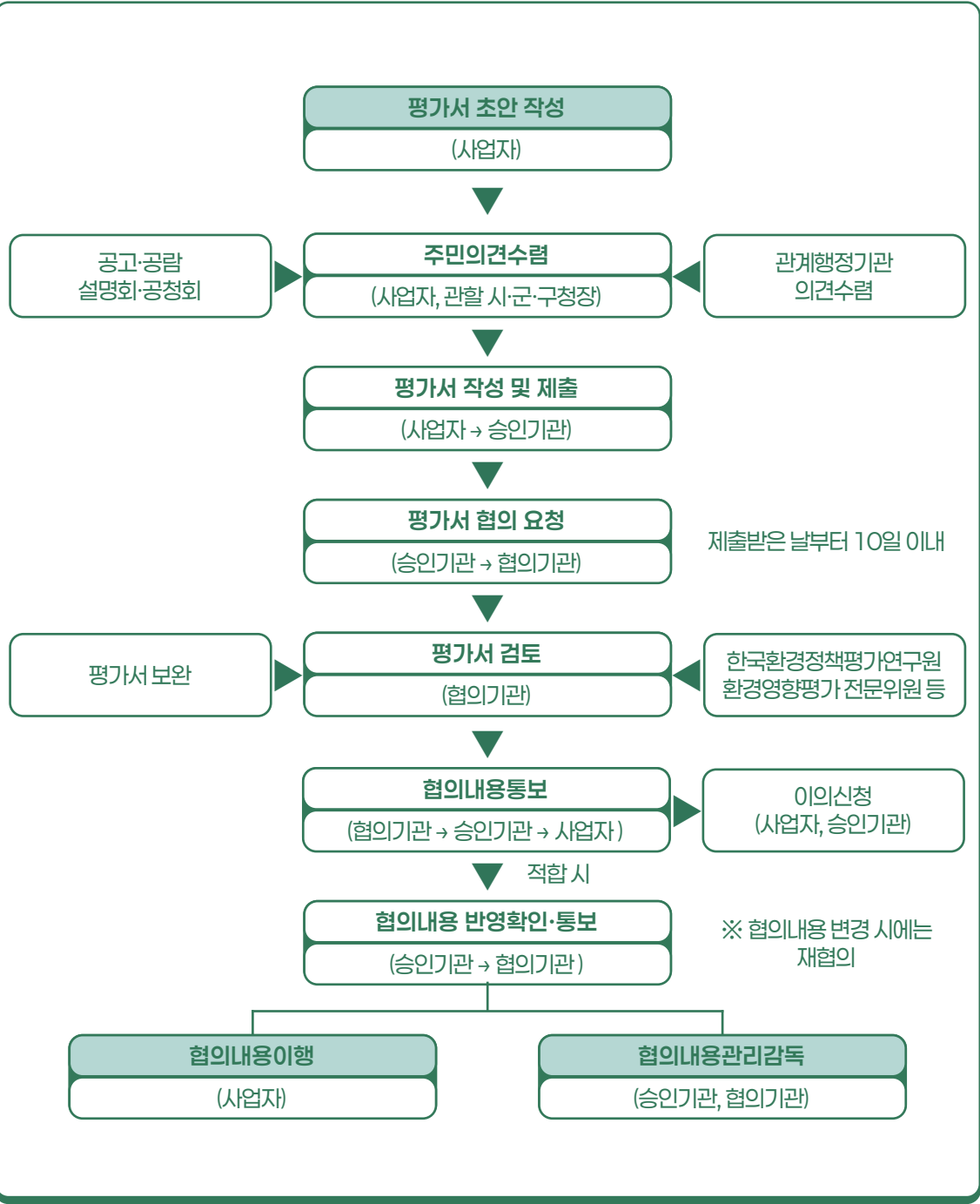
7) 환경영향평가사 도입

(기존)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이 대기, 수질 등 매체별 국가기술 자격자들로만 구성되었으나, (개선)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부여, 평가서 작성을 총괄 관리하게 되었다.

【표 3-3-4】법령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기 준	개 정 안
법률의 명칭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평가 구분	○ 사전환경성검토 - 행정계획(17분야 93개) - 개발사업(21개 보전지역) ○ 환경영향평가(17분야 78개)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행정계획의 구분	○ 상·하위 행정계획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 및 주민의견수렴	○ 행정계획의 성격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 정책계획 :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지역적 범위가 넓고, 기본방향이나 지침적 성격의 계획 - 개발기본계획 : 재정비촉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 계획 - 정책계획은 주민의견수렴 대신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대체 - 개발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수준으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강화 ※ 주민요구 시 공청회 개최 의무화, 협의전 주요사항 변경시 주민의견 재수렴 실시 등
평가관련 위원회	○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 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대행	○ 없음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아무나 작성 대행)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 평가업자 작성 의무화 ※ 대행업무 범위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차등화
평가사 도입	○ 없음 (대기, 수질 등 매체별 기술자격자)	○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도입, 평가서 작성 총괄
벌 칙	○ 사전환경성검토 부실·허위작성 등의 처분규정 없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허위작성 및 협의내용 미이행 등 벌칙 신설

다 환경평가협의 절차도



제1부 고양시 환경정책

제2부 환경일반 현황

제3부 환경관리 기반 조성

제4부 환경보전 정책

부록

제2절 화학물질 안전관리

1. 화학물질관리 현황

화학물질은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20만여 종에 이르며 매년 3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상품화되고 있고, 향후에도 화학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4만 4천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매년 2,000여 종이 새로이 국내시장에 진입되는 등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산업활동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대형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독물 등 화학물질은 인간의 경제활동 물질이기도 하지만 환경오염의 원인물질로써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 과정을 걸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되므로 우리 생활 속에 언제든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화학물질 관리체계

가 화학물질 관련법령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이용목적 및 성상에 따라 8개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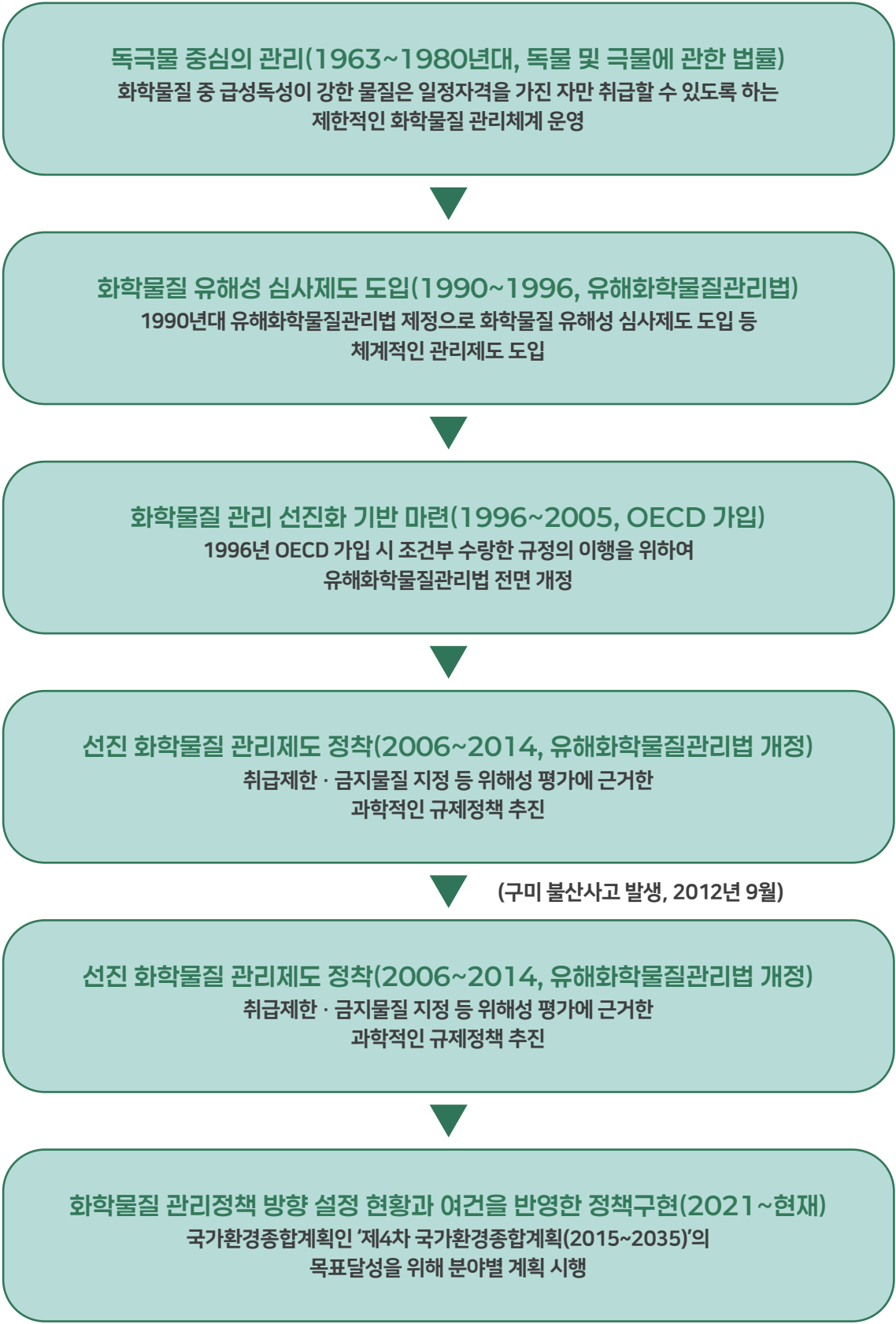
화학물질 중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성이 있는 것을 유해화학물질이라 하며,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보건과 환경위해를 방지하고 종합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화학물질 중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 심사를 통하여 기존 화학물질은 안정성 시험을 통하여 그 독성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유독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유독물 중에서도 그 유해성이 특히 크면 특정용도에만 사용하는 취급제한 유독물과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는 유독물로 분류하고, 급성독성 등의 시험결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만성독성 등이 우려되는 물질은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독물로의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며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크거나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규정하는 등 화학물질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표 3-3-5】 화학물질관리 관계법령 (출처 : 논문발췌)

관리대상	소관부처	관련법령	관리목적
화학물질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보호
사업장 유해물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
위험류, 화약류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 화약류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 방지
	경찰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공산품 중 유해물질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소비제품 안전 확보
의약품, 마약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약품의 적정관리에 의한 국민건강 향상
화장품		화장품법	화장품의 안전관리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 보호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효율적 관리 및 국민 보건 향상
농약, 비료, 사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농약, 비료, 사료의 품질 향상과 수급관리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이용과 안전관리
군수품	국방부	군수관리법	군수품의 적절 관리

【표 3-3-6】화학물질관리법 변천과정 (출처 : 논문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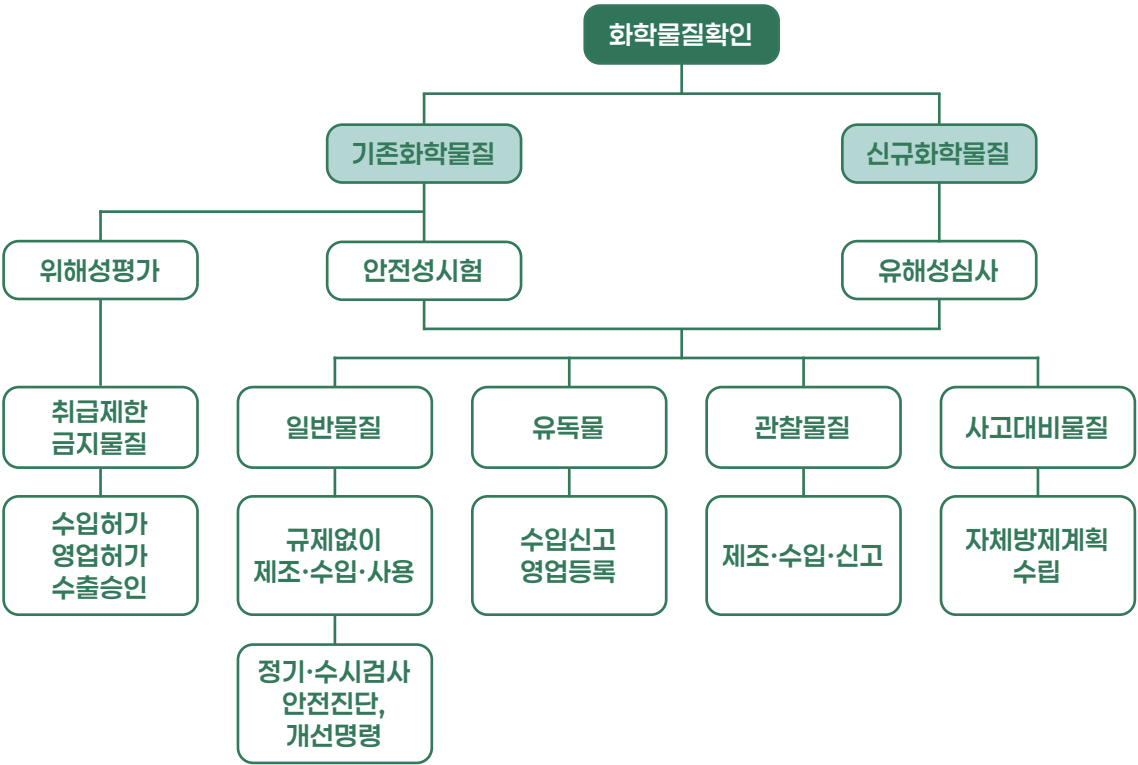
나 화학물질 업무별 관할기관

아울러 2015. 1. 1. 부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정되어, 이 법에 의한 유독물 영업의 등록, 지도·점검 등 관할업무 권한이 모두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업무위임)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표 3-3-7】화학물질 업무별 관할기관

구분	업 무 명	관 할 기 관	처리기간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	국립환경과학원	60일
	유해성심사면제확인 신청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3일
유독물	수입신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즉시
	영업등록	유역·지방환경청	10일(판매 5일)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즉시
사고대비물질	자체방제계획수립	시·도지사, 시·군·구, 유역·지방환경청	허가·등록후 30일 이내 제출
취급제한 금지물질	수입허가	유역·지방환경청	즉시
	영업허가	유역·지방환경청	7일(판매 5일)
	수출승인	유역·지방환경청	90일 이내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유역·지방환경청	15일
	안전진단, 개선명령	유역·지방환경청	

다 화학물질관리 체계도



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제도가 2021년 4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가) 적용 대상 및 구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단, 법 제23조 제1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나) 구성요소

【표 3-3-8】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위해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1군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1. 기본정보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취급시설 목록,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다. 취급시설 입지정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2. 시설정보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 조직		가. 공정정보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나. 안전장치 현황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등의 확인		3. 장외평가정보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신계획		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나.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위험도 분석			
장외영향평가서		4. 사전관리방침			
1. 기본평가 정보		가. 안전관리계획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나. 비상대응체계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등		5. 내부 비상대응계획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나. 화학사고 사후조치			
취급시설 입지정보		6. 외부 비상대응계획			
주변지역 입지정보		가. 지역사회와 공조			
주변지역 기상정보		나.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2. 장외평가 정보		다. 지역사회 고지 계획			
공정위험성 분석					
사고시나리오 선정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안정성 확보방안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보					

3. 고양시 화학물질 관리체계

가 고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2021.12.28. 제정 공포)

고양시는 고양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에 대한 대비·대응을 철저히 함으로써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고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2021. 12. 28. 제정 공포하였다.

조례에는 고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제2조 및 제4조), 고양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제6조부터 제15조까지),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활용을 규정(제16조), 지역대비체계 및 지역화학사고대응 계획을 수립(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및 교육·훈련 등을 마련(제20조부터 제22조까지)하였다.

나 고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고양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2022년 고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고양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 마련으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제고 및 지역사회 화학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5년마다 수립)

< 주요내용 >

-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시책 추진방안
-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1년마다 수립)

< 주요내용 >

-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4. 화학물질 사고 시 대처요령 및 대응체계

산업의 발전과 함께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독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화학물질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양시에서는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가 운송차량 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1) 1차 조치(응급조치)

- 가) 운송차량에서 유독물이 새어 나올 경우에는 안전한 곳에 일단 정차한다.
- 나) 경미하여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경우 새는 부위를 막아 유출을 차단한다.
- 다) 소방서, 환경관서 등 대응기관에 신속히 신고한다.

2) 2차 조치(초동조치)

- 가) 사건현장 상황파악 및 대응방법을 확인한다.
- 나)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다.
- 다) 대기 증으로 누출하는 경우 : 바람의 방향을 등지고 방제 활동을 수행한다.
- 라) 지표면으로 유출하는 경우
 -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흙이나 모래 등을 이용하여 하수구나 하천으로 유입을 차단한다.
 - 누출차단 장비 등을 활용하여 누출 부위를 차단한다.
 - 누출량이 많아 현장에서 조치 불가능한 경우에는 새어 나오는 부위를 최대한 막은 후에 웅덩이 또는 임시제방을 설치하여 오염확산을 최대한 방지하여 화학물질이 하천 또는 농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마) 흘린 유해물질은 중화제 등으로 중화한 후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
- 바) 유출 잔여물은 종류에 따라 희석, 가수분해, 중화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되 희석수에 의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한다.
- 사)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
 - 현장의 오염물질에 누출된 인원은 반드시 개인 제독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사고 수습 이후에도 노출된 화학물질 또는 사용한 소화용수로 인한 오염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고현장, 인근 도랑 또는 하천의 수질을 채취하여 분석한다.
 - 현장에서 수거한 화학물질은 화학사고 예방 매뉴얼 등을 통해 가장 적절한 처리방법을 선택하고,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참고 및 주변지역 청소를 실시한다.

【표 3-3-9】화학물질사고 처리 조치도



나 화학사고 행동요령(출처: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발견시 행동요령

01

사업장, 화학물질 운반차량 주변에서 연기 또는 폭발음, 냄새가 나거나 눈, 피부가 따가울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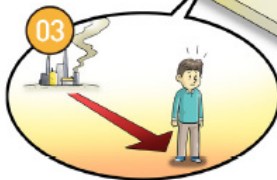
02

신고 시 사고위치, 색깔, 냄새, 증상 등 현장상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신고합니다.



03

화학사고 현장을 구경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



04

방독면이 있으면 착용하고, 방독면이 없다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비닐 등을 이용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실외대피시 행동요령

02

사고발생지역에서 내 위치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직각방향으로 대피합니다.

01

내 위치를 중심으로 사고발생지역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03

대부분의 고독성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이 지면을 타고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가급적 고층건물 또는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불화수소, 암모니아와 같이 위로 퍼지는 특성을 가진 가벼운 물질은 제외)
※ 반드시 관할관청 등의 대피방송에 따라 신속히 대피

04

대피소로 대피하라는 안내가 없는 한 실내에 머물면서 스마트폰, 방송 등을 통해 외부상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05

외부대피가 필요한 경우 실내 및 건물의 모든 출입구와 창문을 닫고, 음식물의 외부노출을 피하고 실내에 밀폐하여 보관합니다. 대피 시 전기와 가스를 끕니다.



실내대피시 행동요령

02

가능한 외부와 연결된 모든 출입문을 닫고, 창문과 출입문을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봉하여야 합니다.

01

사고 발생 초기에 화학물질 누출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약자는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머무르도록 합니다.



03

사고장소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화학물질 폭발에 대비해 창문으로부터 떨어져서 대피해야 합니다.



04

실외에서 스마트폰, 방송 등을 통해 외부상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외부대피가 필요한 경우 방송 등을 확인 후 신속히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05

외부공기와 통하는 설비(에어컨, 히터, 환풍기)의 작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차량대피시 행동요령

02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때까지 에어컨, 히터의 작동을 중단합니다.

01

차량을 타고 사고지역 주변을 통과할 시에는 창문을 닫고, 공기순환은 내부순환으로 바꿔야 합니다.



03

유류, 인화성액체 유출 사고 시에는 차량의 운행을 즉시 멈추고, 시동을 꺼야 합니다.
(사고지점과 가까운 곳에서는 재시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04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경찰, 소방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동하도록 합니다.



05

방독면이 있으면 착용하고, 방독면이 없다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비닐 등을 이용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복귀시 행동요령

01

담당공무원이 주민복귀
방송을 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하고,
복귀 후에는 즉시 환기를
하도록 합니다.

(대피 시 호흡이 가빠지지 않도록
뛰지 않습니다.)



02

사고지역에서는 노출된
식수나 음식을 절대로
먹지 말고, 오염된
물체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03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119에 신고 후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가치료를 시도하지
않고 반드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04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입고 있던 옷
등을 비닐봉투에 담아
폐기하고, 샤워를 하도록
합니다.

